IMD 세계경쟁력 평가보고서, 우리 대학의 대학경쟁력 최하위권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7년간 BK21 사업에 1조 4억 8,200만 원을 투입했지만 대학의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9월 5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세계경쟁력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대학경쟁력 부문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은 60개국 중 52위로 최하위권이다. 영국 『타임즈』가 분석한 경쟁력 순위에서도 서울대는 118위에 그쳤다. 반면 도쿄대는 12위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대학경쟁력 순위는 1998년 47개국 중 34위였으나, 2004년 60개국 중 59위로 떨어졌다. 2005년에는 52위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교육시스템 분야에서도 1998년 46개국 중 34위를 기록했으나, 2005년 평가에서는 60개국 가운데 43위로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다만 국제과학기술논문색인(SCI)의 논문 수는 1998년 3,765편에서 2004년 7,060편으로 늘었다. 심재철 의원은 "단기적 성과 위주의 정량평가는 늘었을지 모르지만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라는 본질적 측면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는 대학경쟁력이 BK21 사업 추진 이전보다도 약화된 데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 BK21 평가결과 보고서에서도 '논문 수는 급증했으나 논문의 영향력은 낮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도 2005년 보고서에서 '지나치게 단기적인 성과에만 급급하고 SCI 논문 편수에 치중하는 평가방식은 근시안적으로 연구 성과를 높은 것으로 보이게 할 우려가 있다'며 착시효과를 주의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BK21 평가를 위한 국내지표 중 학생들이 느끼는 대학, 교수에 대한 만족도와 논문발표로 인한 실질적 영향력 향상 여부 등에 관한 질적 측면의 지표가 없다"고 덧붙였다.

연구목적 위한 수능 성적 공개 일부 승소 판결

연구목적을 위해서라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9월 7일 모 대학 교육학 전공 조모 교수 등 3명이 "2002~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학교별 포함)와 2002, 2003년도 학업수준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능 원데이터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수능 원데이터를 가공하면 출신고교별 · 지역별 학력 격차는 물론 평준화 또는 비평준화 지역 간 학력 격차도 비교해 볼 수 있어 향후 수능 원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결과의 공개 여부 등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일부 교수와 국회의원이 수능 원데이터를 분석해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성적을 비교하는 등 평준화 정책에 반하는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다.

유학수지 적자 위한 영리법인 허용

한미 FTA를 통해 유학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

리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정부 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미 FTA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 고등·성인교육 분야는 일부 개방하되, 영리법인 허용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것이 기존의 정부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의 한미 FTA 협상 전략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은 9월 8일 한국산업연구원(KIET)이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에 제출한 보고서 '한미 FTA 서비스 분야 주요 쟁점별 영향분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유학수요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영리법인 진출을 허용해야 하지만, 영리법인을 허용해도 유학수요가 감소하지 않아 적자 폭은 오히려 더 커지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는 먼저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영리법인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대학들의 한국 진출에 유인이 없다"며 "미국에 대한 유학수요 감소를 위해서는 영리법인 허용 등 시장개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을 일부 인정하고 대학영리법인 진출을 허용할 경우 보고서는 2010년까지 1억 2,000만 불의 유학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현재의 미국 유학은 교육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차원뿐 아니라 정치·경제상의 문제와 복합적인 것이므로 교육 개방이 확대되어도 미국 유학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전망은 크지 않다"며 유학수요 흡수와 교육서비스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정부 측 주장과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이어 "전격적인 시장개방과 학교영리법인 허용 등의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미국 유학 수요가 지속될 경우, 연간 1억 불의 적자 확대가 예상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최 의원은 "현재와 같이 미국유학 수요가 지속될 경우란 영리법인을 허용하더라도 미국대학 분교의 학위에 대한 시장가치가 크지 않아 결국 다시 미국 본교의 학위를 받기 위해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결과적으로 미국 유학수지 적자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대학 교육비 민간부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우리나라의 민간이 부담하는 학교교육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학 학비(수업료)도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OECD는 9월 12일, 30개 회원국과 4개 비회원국의 각종 교육관련 지표들을 분석해 '2006년도 OECD 교육지표(EAG: Education at a Glance)'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2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학교교육비 비율은 7.5%로 OECD 평균 5.9%에 비해 1.6%나 높았다. 학교교육비는 정부재정지원과 학생들이 납부하는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 등 민간 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학원비나 개인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학교교육비 비율이 높은 것은 전적으로 민간 부담금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학교교육비 가운데 정부 부담 비율은 4.6%로 OECD 평균보다 0.6%가 낮은 반면 민간 부담 비율은 2.9%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평균보다도 2.2%나 높았다.

민간 부담 비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고등교육기관의 교육비 중 민간 부담 비율이 GDP 대비 2.0%로 OECD 국가 중 최고인 탓이다. 정부 부담 비율은 0.6%에 그쳤다. 고등교육기관 교육비에 대한 OECD 평균을 보면, 정부 부담 비율이 1.1%로 민간의 0.4%보다 높다.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 수업료에 의존하는 사립대 재학생 비율이 80%를 넘는 현실에서 당연한 결과이다. 2004년 기준으로 국·공립대와 사립대 학생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국·공립 일반대학이 약 22.5%를 차지하여 OECD 평균인 76.7%와 비교하여 최하위 수준이다. 전문대에서 국·공립대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OECD 최하위 수준인 15.0%이다.

대학 학비도 비싼 편에 속했다.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비싼 나라이다. 2003~2004년 기준으로 국내 국·공립대의 연간 학비는 3,623달러, 사립대는 6,953달러였다.

우리보다 국·공립대 학비가 비싼 OECD 국가는 호주(5,289달러), 미국(4,587달러), 일본(3,747달러)이다. 사립대는 미국(1만 7,777달러), 호주(1만 3,420달러), 터키(9,303달러) 순이었다. 일본은 5,795달러였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구매력지수(PPP, 2003년도 우리나라 PPP 환율은 1달러당 784.03원)로 환산한 결과 초등교육 4,098달러, 중등교육 6,410달러, 고등교육 7,089달러로 OECD 국가 평균(초등 5,450달러, 중등 6,962달러, 고등 1만 1,254달러)의 각각 75%, 93%, 63%에 그쳤다.

최근 『뉴스위크』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대학'에 국내 대학이 한 곳도 끼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2004년 기준으로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외국인 학생 비율은 0.3%로, OECD 국가 평균 7.3%에 한참 못 미치는 꼴찌를 차지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여건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5.1명으로 그리스(28.1명) 다음으로 많았다. OECD 전체 평균은 15.5명으로 20명이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그리스, 이탈리아(21.6명) 등 세 나라에 불과하다.

대졸 여성 취업률 OECD 국가 중 최하위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대학교육 이상 이수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지만, 2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대졸 여성의 취업률은 최하위로 나타났다.

OECD가 30개 회원국과 4개 비회원국의 각종 교육자료를 분석해 9월 12일 발표한 '2006년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31%로 OECD 국가 중 3위로 나타났다. 캐나다(53%), 일본(52%)에는 뒤졌지만 스웨덴(42%), 벨기에(41%), 미국(39%)보다는 높았다.

특히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청년층은 31%로 미국(30%)을 젖히고 1위를 기록했다. 2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인구를 봐도 미국(30%)에 이어 캐나다(22%)와 나란히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남녀 성별에 따른 지표들을 보면 여전히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열악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4년제 대학(석·박사 포함)에 입

학한 비율을 보면 남자는 52%로 OECD 평균(48%)보다 약간 높았지만, 여자는 45%로 OECD 평균(59%)에 한참 못 미쳤다. 이에 비해 OECD 평균은 여자(59%)가 남자(48%)보다 높다. 남녀 전체 평균은 전체 48%로 OECD 평균 53%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왔다.

취업률에서도 큰 차이가 났다. 대학을 졸업한 한국 남성의 취업률은 2004년 기준 90%로 OECD 평균 89%보다 약간 높았으나, 대졸 여성 취업률은 57%로 OECD 평균 79%보다 낮은 것은 물론 조사대상 국가 중 최하위였다.

소득수준은 대체로 같은 연령대의 남성 소득에 비해 60~70% 수준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OECD 대부분 국가들과 비슷했다.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30~44세 여성의 소득수준은 같은 학력의 남성이 받는 임금을 100이라고 봤을 때 76% 수준이었다. 그러나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서는 룩셈부르크(78%), 벨기에(77%)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같은 학력수준을 가진 55~64세 여성은 남성 임금의 62%를 받았지만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서는 룩셈부르크(131%)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등 노동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한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55~64세 여성은 같은 학력수준, 연령대의 남성보다 오히려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남성을 100이라고 봤을 때 107의 임금을 받았다.

그러나 30~44세 여성은 같은 연령대 남성의 59%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정보 제공 위한 종합 정보망 개통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 13일 국가인적자원개발(NHRD) 관련 지식과 정보를 한 자리에 모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종합 정보망(www.nhrd.net)을 개통했다.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각종 정책이나 국내·외 연구 동향, 통계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로, 국내·외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연구·통계자료 7,570여 건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 또 '원스탑 자료 제공 서비스'를 위해 630여 국내기관은 물론 국제기구 해외 정부기관, 학회 등 220여 국외기관을 링크시켜 놓았다.

교육부는 고객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부처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주요 이슈, 해외 동향, 보고서 요약 등으로 구성된 메일링 서비스 시범 실시에 들어갔으며, 향후 종합정보망 회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이버대학 감독 대폭 강화

앞으로는 사이버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 21일 원격대학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바꾸고,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등 법률 개정안을 9월 2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격대학의 고질병으로 지적돼 온 부실한 교무·학사관리 개선은 물론 회계운영도 한층 투명해질 전망이다. 관련 3가지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바로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원격대학이 사학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는 학교법인만 원격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비영리 재단법인도 원격대학의 설립 · 운영이 가능하다. 원격대학이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법률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평생교육시설인 '학점인증기관'으로 남거나 문을 닫아야 한다. 다만, 현재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된다.

개정안에는 또 일반대학과의 차별화를 위해 9월에 새 학기를 시작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고등교육법상 고등교육기관이 됨에 따라 원격대학도 앞으로는 대학원을 설립 ·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여교수 비율 4년째 제자리걸음

4년제 대학 여교수 비율이 4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2005년 대학교원 중 여교원 현황'에 따르면 여교수 비율은 2000년 8.5%에서 2005년 16.0%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그러나 여교수 비율 상승 추세를 보면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에만 5.6% 올랐을 뿐 이후 4년 동안은 1.9%만 상승해 상승 비율 정체 현상이 뚜렷했다.

설립형태별로는 정부의 국립대 여교수 임용 목표제에도 불구하고 국립대가 10.7%로 사립대 18.2%에 비해 한참 뒤처졌다.

계열별로는 예체능계열(31.3%)의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자연과학계열 21.7%, 인문사회계열 17.8% 순이었으며, 공학계열은 3.2%로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었다.

교수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교수 비율이 떨어지는 '유리천장' 현상도 나아지지 않았다. 2005년 기준으로 전임강사 중 여성 비율은 29.4%지만, 조교수 19.5%, 부교수 14.4%, 정교수 12.2%로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여교수 비율이 낮아졌다. 국 · 사립에 공통된 현상이다.

개정사학법 반영 대학 9.2% 그쳐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사학법을 반영해 정관을 변경한 대학이 9.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9월 27일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입수한 주요 사립대의 정관개정 현황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174개 법인 중 현재까지 정관 변경을 인가받은 대학은 16개 법인으로 9.2%에 머물렀다. 나머지 대부분의 법인들이 아직까지 정관 변경을 위한 이사회 의결을 계획하고 있지 않는 등 법인 정관개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순영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했듯이 교육부는 9월 말까지 정관을 변경하지 않은 사학법인들을 불법상태로 규정하고, 10월 이후에는 정관 미개정 법인의 임원을 모두 취소할 것을 경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법인 정관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1개월 주기로 관련 조사를 계속 실시하여 개정 사립학교법이 교육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정규직 취업률 전문대학 67.1%, 대학 49.2% 일반대학원 62.8%

정규직 취업률은 전문대학 67.1%, 대학 49.2%, 일반대학원 62.8%이며, 임시직 ·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총 취업률은 전문대학 84.2%, 대학 67.3%, 일반대학원 81.9%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363개 대학 및 139개 일반대학원 졸업자 56만 1,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조사'(기준일:2006년 4월 1일)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2005년 8월, 2006년 2월) 56만 1,203명 중 취업자는 38만 9,157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취업률은 75.8%(전문대학 84.2%, 대학 67.3%, 대학원 석사 78.5%, 박사 90.9%)로 나타나 통계청 조사(2006년 5월)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 참가율 75.7%과 비슷하다.

정규직 취업자는 29만 9,804명으로 전체 정규직 취업률은 58.4%이고, 전문대학 67.1%, 대학 49.2%로 2005년 대비 각각 1.9%p, 1.6%p 상승하였으며, 대학원 취업률은 석사 62.7%, 박사 63.0%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취업자는 8만 679명으로 취업률 15.7%이고, 전문대학 15.6%, 대학 16.7%로 2005년 대비 각각 1.5%p 감소, 1.3%p 상승하였다.

학습지 교사, 연주가, 리포터 등 근로계약기간이 1월 이상 1년 미만 임시직으로 취업한 경우는 11.1%, 아르바이트, 무급가족종사자 등 시간제·일용직으로 취업한 경우는 4.6%에 해당하였다.

회사 구분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대기업 정규직 취업률은 8.8%, 중소기업 37.8%, 관공서 2.8%, 병원 5.4%, 학교 3.6%이고, 학교급별로는 대학의 경우 대기업 11.3%, 중소기업 28.4%, 전문대학은 대기업 5.7%, 중소기업 50.2%로 나타났다.

미취업자는 총 11만 6,137명으로 취업 준비 6만 1,172명, 국가고시 준비 3만 928명, 진학 준비 1만 677명, 기타 1만 320명, 전업주부 3,040명이고, 취업 불가능자는 352명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이 2004년 이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바, 이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의 취업률 지표 활용, 대학-산업체 간 협력 활성화 등과 맞물려 대학의 취업 조사 및 취업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교육 분야 예산 7.4% 증가

내년도 교육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7.2% 증가하고 고등교육 예산도 3.8% 증액된다. 그러나 대학구조개혁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00억 원이 깎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 28일 2007년도 교육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29조 1,273억 원보다 2조 887억 원 늘어난 31조 2,160억 원 규모이다. 내년 정부 일반회계 158조 원의 19.74% 수준이다. 여기에 기금 운용액 3조 1,279억 원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BTL 투자액 2조 4,802억 원을 합하면 교육에 투자되는 재정 규모는 모두 36조 8,240억 원이다.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올해 3조 2,840억 원에서 3조 4,075억 원으로 1,235억 원(3.8%)이 늘어났다. 2008년 3월에 개교할 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 사업에 75억 원이 새로 책정됐다. 올 10월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 10월 말 선정대학을 발표할 계획이다.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사업이 올해 2,910억 원에서 200억 늘어났다. 기초과학과 인문사회 분야 예산이 각각 100억 원 늘어난 탓이다. 인문학 등 최근의 기초학문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보증 학자금 지원도 올해

1,490억 원에서 2,189억 원으로 699억 원 증가했다.

2단계 BK21 사업과 누리사업,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 산학협력체제 활성화 지원 사업,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 등 그밖의 고등교육 관련 예산은 대체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동결된다.

그러나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은 올해 7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100억 원이 삭감된다. 지난해 선정된 국립대 통·폐합과 선도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지만 신규 지원 사업비가 삭감됐다.

입시제도 12년 이상 지속시 공교육 정상화 가능성 주장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고 12년 이상 지속되면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학교는 10월 10일 사범대 교수회의실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울대 입시정책 세미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2008학년도 입시정책과 논술고사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교육청 장학사, 전국 고교 교장과 교사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정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현재 입시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입학전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라며 "지난 50년간 입시제도가 15번이나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또 "입시제도를 바꾸기보다 현실에서 이상 구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며 "입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의 담보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8학년도 논술고사에 대해 발표한 김경범 입학관리본부 연구교수는 발표에 앞서 "현재 입시제도가 바뀌는 주기가 계속 단축되고 있어 3년 단위로 바뀌던 입시제도가 최근 1년 단위로 바뀌고 있다"며 "시스템 변경이 쉽지 않은 공교육에는 바뀌는 입시제도를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처럼 주기가 짧아지면 공교육이 입시제도를 따라잡기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어떤 제도를 실시하더라도 적어도 12년 이상 지속될 수 있고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면 공교육 정상화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급격한 논술 반영 비중 상승 없을 것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총리는 10월13일 "논술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갑자기 논술 반영 비중이 높아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교육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보충발언을 통해 "대학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라며 "고교 정상 수준을 넘어서거나 특수한 형태로 출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학들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대학들이 논술을 주 전형자료로 쓰지 않고 보조자료로 쓰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논술학원이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논술학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에 대규모 종합학원에 포함돼 있다가 소규모로 독립해 나와 논술학원을 차리다 보니 갑자기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신문이 거의 매일 논술학원 광고를 싣다 보니 학부모들이 논술학원을 안 보내면 안 되는 것처럼 선동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과장된 선전광고도 가능하다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비정년 교수 재임용 심사 기회 부여"

대학들이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신분 보장이 안 되는 비정년 트랙 교수 채용을 크게 늘리는 것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가 비정년 교수도 정규직 교수처럼 재임용 심사기회를 주도록 행정지도에 나섰다고 10월 19일자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대학에 '교원 재임용 관련 심사 안내' 공문을 보내고 "비정년 교수도 교원에 해당하는 만큼 재임용 심사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준수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비정년 교수인 모 대학 교수가 대학의 재임용 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5월 "교원에 준해 인사가 이뤄졌고 직무 성격상 교원 신분으로 봐야 하는데 창학 이념 위배라는 거부 사유는 너무 자의적"이라며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모든 대학의 신규 교수는 계약제로 채용하고 있으며, 비정년 교수도 정규 교수와 마찬가지로 교원의 지위를 가지므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임용 심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비정년 교수를 처음 임용할 때부터 재임용 심사 기회조차 주지 않고 해고하는 관행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비정년 교수의 필요성 여부나 채용 조건은 대학 및 교수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학구조개혁 지지부진, 지방 사립대도 실적 저조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사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정부 의욕과는 달리 국립대 통·폐합이 지지부진하다. 지방의 대규모 사립대도 좀처럼 움직일 기미가 없다. 올 들어 눈에 띄게 '실적'이 줄면서 구조개혁 사업도 이제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성급한 전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지난 8월 초 통합 논의를 다시 시작한 경상대와 창원대는 최근 한 달 만에 통합 논의를 중단했다. 이번이 두 번째로 2004년 4월 통합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두 대학은 본부 위치 등에 대한 의견 차를 극복하지 못해 지난해 6월 협상을 중단한 바 있다.

올 8월 초 본부를 창원(창원대)에 두고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할 경우 진주(경상대)에 둔다는 등의 기초합의문을 바탕으로 구성원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본부를 창원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진주 지역 여론을 극복하지 못했다.

전북대와 군산대 간 통합안도 쑥 들어갔다. 통합을 공약으로 내건 이희연 교수가 지난 5월 군산대 총장으로 취임하고,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도 통합 의사를 밝힌 김오환 교수가 최다 득표를 하면서 기대를 받았지만 청와대 인사검증에 걸려 낙마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교육대학 통·폐합의 한 모델로 생각했던 제주대-제주교대 통합도 이렇다할 활로를 찾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충남대-공주대, 충남대-충북대 통합 논의도 사실상 중단되

는 등 올해 들어 통·폐합 실적이 눈에 띄게 줄었다. 국립대 가운데는 유일하게 강릉대-원주대가 통합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일부 학과 교수들 반발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구조개혁선도대학 지원사업도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실적'이 변변찮다. 지난해에는 경희대, 성균관대 등 서울 지역 7개 대규모 사립대가 가세하면서 성과를 올렸지만 올해는 동국대, 중앙대 두 곳 정도만 눈에 띈다.

구조개혁사업에 '새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 대규모 사립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 간 손발도 안 맞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4월 권역이 달라도 사립대 통·폐합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건설교통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들어 난색을 표하자 지난 8월에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도 홀대를 받았다. 대학구조개혁 신규사업비 100억 원이 삭감됐다. "통·폐합 대학 신청이 들어오면 추가로 예산을 배정하겠다"고는 하지만 대학구조개혁이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임을 감안할 때 힘 빠지는 소리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구조개혁과 특성화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데에는 대부분 대학 관계자들이 공감한다. 학생 수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다. 지금처럼 낮은 출산율에 비춰볼 때 2006년 현재 60여 만 명 수준인 고교졸업자 수는 2009년부터 대학 입학정원을 웃도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몇 년간 나타나지만 2016년부터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선다. 2020년에는 46만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본다.

로스쿨 유치 못한 대학만 법과대학 유지 주장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후, 로스쿨을 설치하지 못한 대학만 법과대학 학부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수 한남대 교수(법)는 서울대 법학연구소가 주최한 서울대 개교 60주년 기념 학술회의 '21세기 법학교육의 방향 모색'에서 '대학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법과대학의 위상이 떨어질 뿐 아니라 법과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준도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며 "어떠한 대안도 법과대학의 장기적 안정과 발전을 보장할 수 없다.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지방 군소대학들의 경우 '지역화'를 통해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대학에만 법과대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로스쿨 확산 전 단계에서 법과대학에게 유사법조 내지 하급직 법률보조자를 배출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로스쿨이 확산·활성화됨으로써 법과대학이 소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각 법과대학들이 로스쿨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해 연착륙의 방식으로 법과대학이 해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 의견 간담회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0월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에 대한 의견을 가졌다.

이 날 김윤 회장은 기업 경

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신규 채용인력의 영어 구사 능력 향상을 위한 말하기 위주의 영어교육 확대를 건의했다.

김 부총리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 및 특성화, 국립대 특수법인화 등을 추진 중이며 영어교육 혁신 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인력 양성 단계에서부터 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맞춤형 교육 등 산학협력 활동에 기업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학, 학문 중심과 직업훈련 중심 이원화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10월 26일 '주요국의 최근 교육혁신 동향과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세계 주요국의 대학교육개혁 및 구조조정 작업들이 주로 대학을 학문 · 연구와 직업 · 교육 훈련 중심체제로 이원화하는 혁신플랜에 비중을 두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학 특성화 정책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2001년부터 국립대학 법인화, 제3자에 의한 대학평가, 연구거점 육성책 등을 중심으로 단위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점차 학부 중심체제에서 대학원 중심체제로 변화를 유도하면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 · 교육훈련 기능에 충실하도록 대학원의 전문화, 분업화에 중점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핀란드의 폴리테크닉제도가 대학을 폴리테크닉과 일반대학으로 이원화, 차별화하여 발전시키는 가운데 2003~2008년 교육연구발전계획을 통해 폴리테크닉과 기업 및 산업계와의 산학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최근 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대학과 대학원 단계에서 직업교육, 성인평생교육 등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3의 고등교육기관을 유형화하여 신설하거나 특성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핀란드의 폴리테크닉(기술대학)제가 영향을 미친 결과라는 것이다.

중국 역시 1998년 985공정을 통해 매년 중앙정부 교육예산을 늘려가면서 2003년부터 북경대학, 청화대학 등 총 34개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 육성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써 오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이 추진해야 할 대학교육 혁신방안으로 △대학별 특성화를 통한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대학원 교육의 전문화 △대학 간 · 대학 내 경쟁 촉진과 자율성 강화 △대학지배구조의 개선 △대학수업방식의 혁신 △대학교육의 국제화 등을 제시했다.

산학협력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추진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연구처장협의회(회장 서판길 포항공대 연구처장)는 10월 26~28일 제주도에서 '대학의 산학협력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제도와 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를 교육부에 건의하고 각 기업체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산학협력 시 개발된 모든 지식재산권을 대학과 기업이 공동소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학연구과제 기본합의서(안)'에 따르면, 연구성과에 대한 추후 보상과 라이센싱으

로 인한 수익금에 대해서도 공동 배분하도록 했다. 이에 대학이 보유한 관련 기술분야 선행 특허를 사용할 경우 기업은 대학과 반드시 별도 협의토록 규정했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국내외 출원, 심사, 등록 유지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기업이 부담토록 정하고 있다.

'직업 · 교육훈련 양성 대학'으로 이원화하여 운영과 지원을 차별화하는 대학 특성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 측의 주장에 대해 기업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대학 측이 이 같은 내용의 산학연구과제 기본합의서를 채택해 표준화하기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우려된다. 기업 측은 우선 기업이 연구비 100%를 지원하므로 그 결과물은 기업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연구성과에 대한 추후 보상에 대해서도 기존 연구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이센싱 수입금 배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대학 측의 선행 특허권 사용을 별도 합의하자는 주장에 대해 연구책임자를 선정할 때 보유 기술과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선행 특허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총리, 논술고사 관련 사립대학 총장들과 간담회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총리는 10월 27일 사립대학 총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논술고사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수준과 유형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논술고사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고교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논술을 출제하는 대학과 준비하는 고교 간의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학 총장들도 논술고사 출제 과정에 고교 교사들을 참여시키는 것에 공감하며, 대학마다 방법은 다르지만 그러한 방안들을 강구해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 총장들은 대학들도 대입제도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으며, 대학이 앞장서서 대입제도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학생들이 학원에 가기보다는 좋은 도서를 많이 읽고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앞으로 고교 교사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논술고사 유형을 발전시켜 2007년 3월까지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부총리와 총장들은 대학평의원회 구성,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부총리는 재정을 확대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대학들도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6년 '구조개혁 선도 대학 지원 사업' 선정 결과 발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도 '구조개혁 선도 대학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10월 31일 발표하였다.

올해 총 7개 대학에서 동 사업 참여를 신청하였으며, 이들 대학 중 심사를 통하여 동국대와 중앙대를 '대학 구조개혁 지원사업' 대상 대학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3년간 총 178억 원, 올해 1차로 120억 원을 지원받아 입학정원 감축 등을 통하여 대학의 강점 분야로 내부 구조개혁을 추진하게 된다.